



#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농림축산식품부를 고수하라 식품산업 농축산분야로 일원화되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를 해양수산부로 신설하여 분리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처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식품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농축산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다녀간 후 '농림축산식품부' 명칭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우리 업계는 한껏 고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업중 축산의 비중이 42%를 차지하는데다 축산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인수위원회에서 '식품'을 빼고 '농림축산부'로 발표하면서 농축산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농민관련 단체들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식품업무를 농림축산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5년 전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할 전담부처가 어렵게 만들어져 날로 증대하는 식품산업의 사회적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지원 육성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부처 명칭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 식품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의 지원육성 의지가 위축된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5천만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차적 책무를 위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농수축산업과 함께 식량공급의 주체이며 식량정책의 중심에 있어야할 산업분야이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중요성 때문에 부처명칭에 '식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명패를 걸고 식량산업 증진에 매진해야한다.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국내 식량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통일을 대비한 식

품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식량안보의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로 식품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국민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식량 안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축산물 관리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산업은 1, 2차 산업과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농림축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2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인수위 활동과 함께 국정방향이 다져지고 있다.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헤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개칭되어 국민을 책임지는 흔들리지 않는 농축산산업이 되었으면 한다.

### ‘추적60분’ 축산물 항생제 보도 파문 축산업계 크게 반발, 대응책 모색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KBS ‘추적 60분’에서는 축산물에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에 골자로 1월 30일 정규방송에 내보내기로 하면서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매년 연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축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장마다 꼴뚜기’처럼 자주 등장하는 매뉴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주요 판매장에서 수거한 300여점의 축산물중 20~30%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항생제 기준 허용치를 감안하지 않고 정량검사가 아닌 정성검사만으로 항생제 검출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설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항생제 검출보도가 나올 경우 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무척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추적 60분” 취재팀이 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계업계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를 비롯하여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여 항생제 잔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취재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피력했으며, 불황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를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다.

축산물 전체적으로 다루어지게되는 이번 보도에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발빠른 대응을 하고있다. KBS 항의방문을 통해 방송을 취소하거나 방송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는 한편, 역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기위해 공공기관에 의뢰해 시료를 채취, 검사, 발표키로 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에 위임하여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 국립환경보건원 등에 의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받는다든 계획이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언론에 의해 양계산업이 좌지우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근거없는 허위 보도가 얼마나 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직시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방송을 내보내는 공영방송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의 공포

### 2011년 대비 저병원성 시검출 3.8% 증가

정부에서는 금년 봄에 국내에 고병원성 시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가금 농가들의 자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정부가 야생철새 및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상시예찰 검사결과, 고병원성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저병원성시가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및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일명 여름철새)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봄 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고병원성 시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난 20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상태이지만 시가 발생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에서는 양계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시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소독, 양계장간 이동시 신발갈아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 농장주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 의심축을 발견하면 즉시 본회나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회는 금년부터 질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장화갈아신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다. 종계농장을 중심으로 전 농가에 장화나뉘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양계질병 예방의 기본은 농장출입시 차단방역에 있다. 사양관리를 위해 계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판소독을 한 후 장화를 갈아신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장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계사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우리농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동남아 등 외국에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상 외부로부터 시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차단방역 등으로 시없이 겨울을 날 수 있는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양계**